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답변 전문

정책자료집의 표절의혹에 대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정부 발표자료를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특히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 문제제기가 된 이 정책자료집은 정부 발표자료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닙니다.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 의원실에서는 금융위 실무담당자들과 여러차례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그 제도의 설명과 내용 등 자료와 대표발의한 법안까지 곁들여 국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어느 누구의 독점이나 성과로 매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현상에 대해 국민 다수의 여론을 들어 이를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그 정책이 그 사람만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성과나 논문은 그 연구자의 고유 업적으로 인정받고 이로 인한 영리추구도 가능할 것이나, 정부 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제안자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가 중요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누가 자신의 성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같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기에 자료집을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논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정책자료집을 논문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구매를 받지 않아야 하고, 논문과 같이 출처나 인용표기를 해야 한다는 기준 또한 없는 것으로 압니다.

2. 이 같은 인용표기 없이 정부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집행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상정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표하고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걸 정책자료집에 활용된 자료들 또한 정책당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받은 자료이고, 그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인용표기 없이 정부 자료를 베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고위공직자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중복게재, 표절 의혹 등입니다. 이 사안의 윤리적, 도덕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발표자료를 출처 표기없이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걸 정책자료집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과 논문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자료집은 하나의 이슈를 두고 의원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또 이 자료집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필요하다면 국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 정책자료집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기에 특정인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수차례 정책당국과 협의를 하였고, 그 입법적인 뒷받침을 위해 관련법률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한 사안입니다.

4. 앞에 거론된 정책자료집 발간 과정에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즉 국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정책자료집마다 집행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할 수 있으신지요?

⇒ 이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하나로 묶어 인쇄하는 것으로 50~100부 가량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데, 그 집행된 금액은 인쇄에 소요된 발간비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국회사무처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의혹이 제기된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의원님이 청구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반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이 정책자료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해진 규정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행위는 의원님 뿐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각 의원실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있어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타인의 연구물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제기 한 이걸 정책자료집도 특정인의 연구물이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해 수차례 정책당국과 협의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한 정책 질의와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등 그 과정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를 두고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정부 발표자료를 그대로 베낀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고 싶어 하지 숨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과 정책자료집의 내실있는 발간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책자료집은 정책수립에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제시를 담는 것을 지향합니다.
문제제기한 바와 같이 논문과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정책제안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국회 전체 자원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입니다.